

# 고유정, 2심 최후진술서 “난 언론의 희생양” 억울함 호소

### 전 남편 살인사건 ‘우발적 범행’ 거듭 주장

### 검찰 사형 구형...내달 15일 선고공판 열려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2심 재판 중인 고유정(37)이 재차 억울함을 호소하며 자신은 과도한 언론 취재의 희생양이라고 주장했다.

광주고등법원 제2회 1형사부

(부장판사 왕정욱)는 17일 오후 제2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의붓아들 사망사건 역시 자신과 무관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고유정은 1심 재판부가 여론과 언론에 휘둘려 전 남편을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는 자신의 주장을 믿어주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고유정은 “1심 재판부가 제 변호인을 질책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상 포기했다”며 “판사가 선고 전에 유죄로 생각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고유정은 최후진술을 통해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받은 전 남편 살인사건에 대해 우발적 범행이

라고 거듭 주장했다.

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의붓아들 사망사건 역시 자신과 무관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고유정은 1심 재판부가 여론과 언론에 휘둘려 전 남편을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는 자신의 주장을 믿어주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고유정은 “1심 재판부가 제 변호인을 질책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상 포기했다”며 “판사가 선고 전에 유죄로 생각한 것”이라고 말했다.

고유정은 “재판이 끝나고 감옥에 가서 언론이 저를 표현한 것을 보면 누가 제 말에 귀기울여주나 싶다”며 울먹이기도 했다.

이러 “이제 한가닥 희망은 항소심 재판부라며 험악하고 거센 여론과 무자비한 언론 때문에 마음의 부담이 크겠지만 용기를 내달라”고 요청했다.

고유정은 최후진술에서 기자들이 교도소까지 찾아온 적이 있다며 언론에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

고유정은 “재판이 끝나고 감옥에 가서 언론이 저를 표현한 것을 보면 누가 제 말에 귀기울여주나 싶다”며 울먹이기도 했다.

또 “1년 전까지만해도 평범한 아이 엄마로 살다가 감옥에 갇히니 마치 꿈꾸는 것 같다”며 “죽어서라도 억울함을 밝히고 싶은 심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 남편 살해는 당황해서 갑작스럽게 벌어진 일이고 의붓아들은 결코 죽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고유정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7월15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오체 투지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회원들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차별금지법 조속 제정 촉구를 위한 오체 투지를 하고 있다.

## “돈 안값고 비난”...채무자 살해 60대 2심도 징역 12년

### 광주고법, 항소 기각

돈은 값지 않고 도리어 자신을 비난한다며 채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관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태호)는 1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증거 등을 살펴

보면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1심 판결 이후 양형을 변경해야 할 사정의 변화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3일 오전 10시30분쯤 전남 고흥군청 앞에 세워진 B씨(69)의 차량에서 흉기를 수차례 휘둘러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직후 차에서 약 200m 떨어진 곳에서 전화로 “흉기로 사람을 찔렀다”며 자수를 했고 A씨는 출동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

은 피해자가 채무변제를 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비난하고 책망한다는 이유로 살해했다”며 “중단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수차례 범행을 가한 과정과 방법, 정황에 비춰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러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인 상황에서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후 자수한 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코로나로 상가 임대료 밀려 계약해지 안되도록 법 개정

법무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국내경기 침체 대응의 일환으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법제 개선에 나선다.

법무부는 3일 서민생활 안정과

회 상실 사유에 해당하는 차임연체액'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설명이다.

이들러 재난상황이 발생한 경우 차임증감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도 명확히 규정할 방침이다.

상호등기가 있는 사업자만 가능하던 동산담보를 개인 사업자에게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 법무부 측의 계획이다. 소액영업소득자의 신속한 재기를 위한 채무자 희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경우 이미 최근에 개정되 지난 2일부터 시행됐다.

간이회생제도의 이용 대상 부채 한도를 현행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확대하는 것이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골자다.

법무부는 이밖에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영주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공익사업 투자이민'을 확대해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특별귀화 대상이 되는 우수인재 범위를 4개에서 10개로 확대하는 등의 정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국내 경기 침체 대응 일환 서민생활 안정 법제 개선 나서

### 법무부, 임대차보호법 개정 등 추진...일괄담보제도 도입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심화정도를 고려해 일정기간 동안 발생한 차임연체액은 계약해지·계약갱신 거절 및 권리금 회수기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동종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비동산 담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동산·채권·지식재산권 등 다양한 자산을 포괄해 한 번에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는 일괄담보제를 도입하고, 법인 또는

## 고령 사망자에 1살배기까지 확산...전 세대에 덮친 코로나

### 지하철 안전관리요원 확진에 '지하공간' 불안감도 커져

서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던 80대 노인 2명이 이를 연속 사망한 것을 비롯해 생후 1개월 영아가 확진 판정을 받는 등 코로나19가 세대를 가리지 않고 파고드는 모습이다.

18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도봉 성심데이케어센터 환자가 사망했다. 센터를 이용한 뒤 11일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도봉구 거주 82세 남성이다. 이 확진자는 기저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6일에도 사망자가 나왔다. 지난 7일 확진됐던 서대문구 1933년생 남성(87)이 이날 사망했다. 기저질환이 있었던 그는 5일 폐렴증상으로 입원해 7일 확진판정을 받았고, 이후 격리치료를 받다가 사망했다.

고령자가 안타깝게 숨을 거둔 것뿐 아니라 올해 태어난 아기가 지 코로나19에 감염됐다.

지난 15일 밤 은평구 진관동의 생후 1개월 남자 영아(은평구46번)가 확진됐다. 이 영아는 같은날 확진 판정을 받은 갈현1동 거주 60대 여성(은평구 44번)의 손주다.

구 44번 환자는 15일 오후 3시쯤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그는 지난 2일부터 손주를 돌봤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딸(은평구 45번)과 손주는 같은 날 은평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았고, 모자(母子)는 15일 오후 11시45분쯤 확진판정을 받았다. 가족 중 최초 확진자인 C씨의 감염경로는 아직 확인중인 상태다.

이렇게 80대 노인부터 1살배기까지 코로나19를 피해가지 못하며 시민들의 걱정도 높아가는 모습이

다. 누구든 감염될 수 있고, 고령에 기저질환이 있었긴 하지만 사망까지 이를 수 있다는 점이 공포감을 키운다. 또 무증상 확진 사례가 적지 않고, 음식이 나왔더라도 재검 결과 확진되는 사례가 있어 안심할 수 없다는 게 문제다.

지하철 사형역 안전관리요원 사례도 걱정이다. 이제까지 안양과 성남, 용인, 부천시 등 총 5명의 관련 확진자가 발생했다.

시는 이 확진자들이 시민과 접촉이 있었는지에 대해 “공사 인부가 아니고 그 구역에 시민들이 접근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맡은 여르신들”이라며 “이곳 주변을 통제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시민들과 접촉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답했다.

하지만 지하공간에서 발생한 확진자라는 점에서 시민들의 우려가 사그라들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NDDP 인쇄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 803번안길 93-10  
TEL : 062)943-0135 ~ 6  
FAX : 062)943-0134